

OECD 사회지표 중 자립 (Self-Sufficiency) 지표의 분석

Self-Sufficiency in OECD Social Indicators: Analysis & Implications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경제 발전과 대비되는 개념을 각국의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을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사회적 실천(주로 정책)이 사회발전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사회발전이란 건강, 교육, 경제력과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회발전은 크게 네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립(Self-Sufficiency), 형평(Equity), 건강(Health),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부문은 일반여건(General Context)을 기준으로 각 부문의 상태(State)를 나타내는 지표 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 군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전체 사회지표에서 <자립> 부문 지표는 고용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것은 사회구성원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며, 전체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취업 기회가 주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보육과 교육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인적자본을 어떻게 배양하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여건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것은 <자립> 부문의 지표가 생애주기를 거쳐 인적자본을 어떻게 배양하고,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어떻게 퇴장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자립 부문의 지표들은 <보육서비스를 통한 조기교육 및 사회화> → <학령기 아동의 교육성취도> → <청년의 노동시장진입> → <취업인구 비율 및 실업인구 비율> → <공식 및 실질 퇴직 연령>의 순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2. <자립> 부문의 지표구성

OECD 보고서는 <자립>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을 설명하는 지표는 아래 <표 1>과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와 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나타내는 대응지표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자립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보육서비스 이용비율, 학업성취도,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인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공식적·실질적 퇴장연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교육비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자립>을 설명하는데 <형평>부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지표, 즉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빈곤율, 아동빈곤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형평> 부문의 정책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종 사회안전망, 즉 공공부조

제도를 위한 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총사회지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립을 나타내는 사회지표를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인구(근로연령집단)가 유급노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체계의 물적 토대가 안정적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노동은 돈을 벌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참여를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체계는 근로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고용인구의 규모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OECD 국가들의 최우선 정책과제인지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실업률은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구집단의

표 1. 자립 지표의 구성 항목

실태 지표	대응 지표
SS1. 고용	SS7. 교육비 지출
SS2. 실업	
SS3. 보육	
SS4. 학생들의 성취도	
SS5. 비경제활동 및 비학생인구	
SS6. 노동시장 퇴장연령	
EQ1. 소득불평등	EQ4. 최종 사회안전망의 적정성(총족성)
EQ2. 빈곤	EQ5. 공공사회지출
EQ3. 아동빈곤	EQ6. 총사회지출

주: 아래 지표 중 EQ군의 지표는 형평(Equity)을 나타내는 지표군이지만, 자립을 평가하는데도 필요한 지표임
 자료: OECD(2010), <Society at a Glance 2009: Social Indicators>

규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고용 부문에서 위험 또는 박탈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공식 실업률로 고용부문의 위험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매우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매우 제한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실업기간별, 인구집단별 실업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장기실업자 비율 및 청년실업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보육서비스 등록률은 공적인 조기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지표가 채택된 이유는 성장기 아동의 인지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의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표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보육서비스의 등록률은 그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남성부양자모델에서 맞벌이모델(Dual Earners Model)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넷째,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Student performance)는 한편으로는 생애주기 중 아동기의 인적자본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리고 이 지표는 단순히 학교 진학률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생

들의 인적자본형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수학(Mathematics)과 읽기(Reading) 그리고 과학(Science) 분야에서 측정된 지표(PISA)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즉 학업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배제될 위험성을 가진 집단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로의 성공적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유럽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사회 또한 최근 청년들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가 갖는 잠재적 위험성은 매우 크게 인식되고 있다.

여섯째, 공식 퇴직연령과 실질적인 노동시장 퇴장연령의 비교는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공식 퇴직연령과 실제 퇴직연령의 차이를 통해 노인들이 얼마나 더 노동시장에 체류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사회지표는 공식 퇴직연령은 연금수급연령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실제 퇴직연령은 각국 횡단면데이터에서 노인 취업인구의 평균 연령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종단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끝으로 <교육비 지출>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교

육비 지출과 관련해서 공적지출과 사적지출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적자본형성과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한 투자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참고로 교육비 지출에 있어 사적 지출 비중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투자전략에서 국가의 책임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매우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물론 OECD 사회지표는 자립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충분한(exhaustive)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것은 국제비교를 위한 정보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부문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지표는 현대사회의 고용 문제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출현, 즉 근로빈곤층의 출현으로 인해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힘들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안정적으로 기여하기 힘든 집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또는 저소득근로자 비율이 필요하며, 가구 단위에서는 근로빈곤층 비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아직 국제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문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사회지출과 관련해서 기능별 지출비중의 국제비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OECD 사회지표 중 자립 부문의 정책노력으로 교육비

지출이 강조되고 있으며, <형평> 부문에서 전체 사회지출과 공공부조제도를 위한 사회지출이 지적되고 있지만, 고용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 즉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지출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직으로 인한 빈곤위험을 완화하고, 노동이동에 필요한 지원을 사회화하는 정책적 노력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 <자립> 지표의 국제비교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OECD 사회지표 중 <자립> 부문의 지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장의 실태와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큰 네 가지 지표, 즉 <보육비 지출 수준>, <교육비 지출의 수준과 구성>, <고용률의 추이>, <공식 및 실질 퇴직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참고로 아래 설명은 생애주기별로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것은 미취학 아동 - 학생 - 취업자 - 퇴직자 순으로 재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1) 보육부문의 실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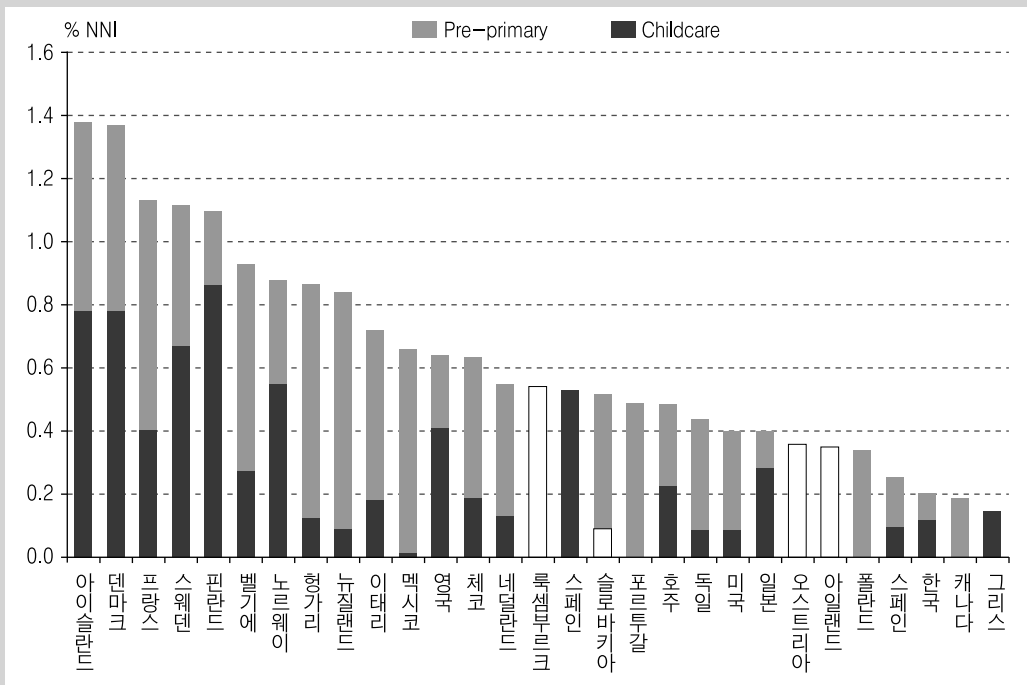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은 22.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5세 아동의 등록률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OECD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사적 보육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은 3세 미만과 3~5세 아동의 등록률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가족구성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보육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록률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한 제도적 투자 문제이다. 어떤 사회도 교육을 통한 사회화와 인적자본개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책임이 개별가구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은 개별가구의 소득능력과 사회적 자본 등에 의해 또 다른 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조기교육을 위한 공적지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지출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개별가구가 전적으로 보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여성들은 자신의 기대임금과 지출부담 그리고 무형의 손실

그림 1. OECD 각국의 보육을 위한 공적 지출 비교



자료: OECD(2010), <Society at a Glance 2009: Social Indicators>

을 판단할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용이하지 않다. 이 점에서 보육비의 공적지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림 1]은 OECD 각국의 공적 보육비 지출 비중을 0~2세와 3~5세 아동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OECD의 평균 보육비 지출은 NNI의 0.66%로 멕시코가 그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그보다 지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북유럽국가나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프랑스 등이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이른바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나, 남유럽국가들 그리고 한국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0.2%수준으로 공적지출만으로 보면,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부문의 실태 비교

학업성취도는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학교진학률이나 교육비 지출과 같은 물적 지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진학률을 보면, 국가와 교육과정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초중등 교육과정의 진학률은 대부분의 국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차이는 주로 대학진학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비판적 검토

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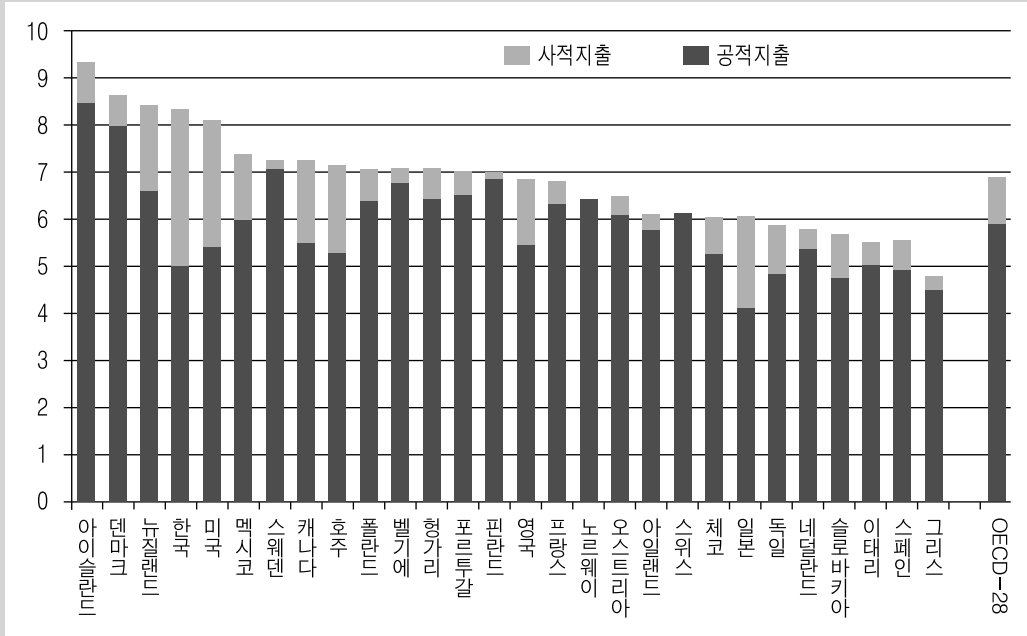
교육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순생산(NNI)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교육을 위한 정책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림 2]는 교육비 지출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그것이 국민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두드러진 점은 한국의 경우, 총 교육비지출은 OECD국가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성을 보면 개별가구가 부담하는 사적지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공적지출 비중이 과도하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체계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소득계층에 따라 교육격차 또는 교육비 격차가 확산될 위험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PISA가 발표한 2006년 기준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영역별로 보면, 한국은 수학과 읽기는 비교대상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과학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은 학교진학률과 높은 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성취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개별가구의 소득불평등이 교육부문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3) 고용부문의 실태 비교

고용률은 해당 국가가 근로연령집단 중 얼마

그림 2. OECD 각국의 NNI 대비 교육비 지출 비교



자료: OECD(2010), (Society at a Glance 2009: Social Indicators)

나 많은 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고용률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1980년 이후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OECD 평균을 보면, 1990년대 중반 고용률이 감소추세를 나타내다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고용률은 매우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용률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상이한 세 가지 경향에 주목하

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고용률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고용률 증가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높은 고용률은 역설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률 지표가 저임금근로자 등의 보완적 지표를 통해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림 3]에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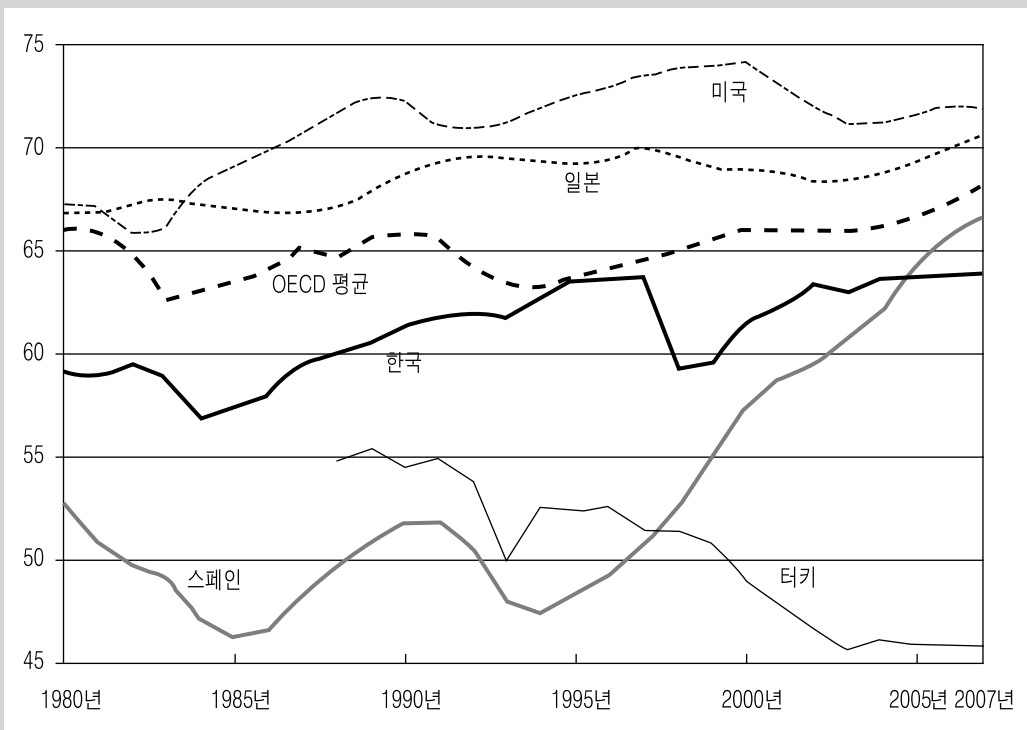
나 있지 않지만, 2008년과 2009년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국면과 맞물려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스페인의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재정수지 또한 2007년까지 흑자를 유지해 왔다. 이는 스페인이 최근 재정위기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유럽화폐통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

하고, 이후 관광산업이 부진하여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스페인경제를 성장으로 이끌던 유럽 단일화폐체계가 역으로 환율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역설이다.

셋째,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왔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급

그림 3. OECD 주요국의 15~64세 인구 고용률 추이



자료: OECD(2010), <Society at a Glance 2009: Social Indicators>

락하고 이후에도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OECD 평균 또는 서구 복지국가와 보이는 고용률의 격차가 상당부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고용률 제고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4) 퇴직 또는 노후소득보장의 실태 비교

취업자가 노동시장에 몇 살까지 머물고 있는가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공식 퇴직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노후대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공식퇴직연령과 실질퇴직연령을 비교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제한 철폐 등의 조치보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는 각국의 노동시장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하나는 공식 퇴직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인구가 많은 경우를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공식 퇴직연령에 비해 실질 퇴직연령이 낮은 경우이다.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조기에 노

동시장에 퇴출된 경우와 정책적으로 조기퇴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역모기지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하나는 공직 퇴직연령에 비해 실질 퇴직연령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국가는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 등을 들 수 있다. 이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독특한 노동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가족주의의 점진적 해체와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맞물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가정책 차원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동할 수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가 힘들어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사회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재정부담이 적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OECD 사회지표 중 <자립>의 정도를 나타내

표 2. OECD 주요국의 성별 공식퇴직연령과 실질퇴직연령

(단위: 세)

	남자		여자	
	실질	공식	실질	공식
멕시코	73	65	75	65
한국	71.2	60	67.9	60
일본	69.5	63	66.5	61
포르투갈	66.6	65	65.5	65
스웨덴	65.7	65	62.9	65
아일랜드	65.6	66	64.9	66
미국	64.6	65.8	63.9	65.8
터키	63.5	60	64.3	58
캐나다	63.3	65	61.9	65
영국	63.2	65	61.9	60
그리스	62.4	58	60.9	58
독일	62.1	65	61	65
스페인	61.4	65	63.1	65
이태리	60.8	65	60.8	60
핀란드	60.2	65	61	65
벨기에	59.6	65	58.3	62
오스트리아	58.9	65	57.9	60
프랑스	58.7	60	59.5	60
OECD 평균	63.5	64.1	62.3	62.9

자료: OECD(2010), <Society at a Glance 2009: Social Indicators>

는 지표는 생애주기별로 한 사회구성원이 얼마나 자립적 또는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취학 전에는 어떻게 사회화 과정에 포함되며, 학령기에는 어떻게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고, 근로연령인구는 얼마나 취업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노후에는 얼마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OECD 사회 지표가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는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이를 위한 지출측면에서도 비교 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부담이 과도하게 개별가구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화와 교육기회 그리고 교육의 질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교육부문, 특히 고등교육부문에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연령인구의 취업기회와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2>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사회는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연령인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분배를 원활하게 하고, 이차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사회는 퇴직인구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게 다양한 충격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이미 퇴장한 노인의 빈곤과 그로 인한

취업문제이다. 이는 취업기회 제공과 소득보장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어 공식 퇴직연령이전에 조기 퇴출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일해야 하는 집단이다. 이는 퇴직연령과 급여체계를 조정하여서라도 퇴출을 막아야 할 집단이다. 특히 점진적으로 직무별 급여체계와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공적 사회지출이나 교육지출을 확대하는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고용조정과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본문**